



〈안 내〉

'학술지 실태점검 사례집'은 학회/학술지의 부실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학회의 연구 윤리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 각 사례는 최근 실제 학술지 실태점검 자료 및 결과 등을 토대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1 ————— 학술지 실태점검이란? 5

2 ————— 부정(부실) 사례 11

사례 ① 과거는 제게 남아있지 않아요. 12

실태점검 자료 미제출 및 부실 제출

사례 ② 논문도 재사용이 되나요? 14

자신 또는 다른 학술지에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을
자신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사례 ③ 이 논문은 초면입니다만. 15

실제 투고·심사되지 않은 논문을 게재불가논문으로 사용

사례 ④ 투고대장의 변신은 유죄! 16

학술지 평가 및 실태점검 시 제출한 논문투고대장 불일치

사례 ⑤ 콩심은데 팔이 나고. 17

논문의 제목과 초록 불일치! 논문의 내용과 심사내용 불일치

사례 ⑥ 발자국이 왜 남지 않을까? 18

논문의 심사의뢰비 또는 심사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례 ⑦ 1+1=3? 19

심사서 항목별 합계와 최종 합계 점수 불일치(조작)

사례 ⑧ 플레이어와 심판이 동일 인물이라고? 20

투고자가 심사자인 경우

학술지 실례점검 사례집

+

3 **주의 필요사례** 21

사례 ① 연구윤리에도 수명이 있나요? 이젠 없어요! 22
 연구윤리 규정 검증시호 폐지

사례 ② 한번도 개최될 수 없는 연구윤리위원회 23
 연구윤리위원회 제소에 일정 수 정회원 서명 필수

사례 ③ 심사를 거치니 번역이 되는 마법이 일어났다? 24
 국문 논문으로 심사 후, 별도 심사없이 영어 논문으로 게재

사례 ④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지양해야겠조! 25
 임원진 또는 특정 소속의 심사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

사례 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26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일, 입력 시간이 유사한 경우

사례 ⑥ [System] 비정상적 트래픽이 감지되었습니다. 27
 투고자 계정 무작위 생성

학술지 실패점검 사례집



1

학술지 실패 점검이란?

1

학술지 실태점검이란?



실시 목적

- 정기적/상시적 실태점검을 통한 학술지 운영의 윤리적 문화 조성
 - 등재학술지 운영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 '20년도부터 별도의 예산 및 사업으로 정량/정성 항목 등에 따라 체계적·정기적으로 추진



점검 대상

- 매년 전체 등재(후보)학술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약 10%에 해당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수시적) 실태점검 실시
- * '20년 250종, '21년 262종, '22년 260종 내외 예정



점검 자료

- 학술지평가 심사자료 및 학술지 운영 관련 자료
- 논문투고대장, 심사서, 탈락논문 원문, 민원처리 현황 등



점검 범위

- 직전 1년~3년치(2020년~2018년) 및 특정 기간
- * 학계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매해 전년도 학술지평가 대상 범위 준용

⚙️ 점검 방법

- 전문용역업체 위탁을 활용하여 실태점검 추진
 - (용역업체) 서류 1차 점검/확인, 통계분석 등 세부 기초업무 수행
 - (재단) 서류 2차 정밀 점검/확인 및 필요 시 현장점검(현장실사)

📊 점검 항목 및 지표

점검 부문		점검 지표	배점
1	심사서 유무 및 원본 확인	심사서 원본 확인불가 건의 빈도 및 부실경중 정도	30
2	심사여부 및 심사내용	심사의견 유무 및 충실성	30
		게재논문 철회 유무	
3	게재 불가된 논문 건수 및 원문 확인	탈락 논문 확인불가 건의 빈도 및 부실경중 정도	30
4	민원처리	접수된 민원 처리여부	10
5	학술지 발행기관의 윤리성	학술지 발행기관의 중대한 연구부정행위 사안 발생여부	별도 심의
계			100점

🗨️ 점검결과 조치 기준

- (정량항목) 점검결과와 합산 점수에 따른 등급화 및 등급별 결과 조치 기준에 근거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실시
 - 총 5개 등급(A~E 등급)으로 구간화하며, 학술지 등재제도 및 학술단체지원사업 연계 조치 결정
 - 점검결과와 등급별(A~D) 차등화된 조치를 시행하되, E등급(불량) 내 세부조치(등재등급하락 or 등재취소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등급구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내역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불량
점수구간	85점 이상	70~84점	60점~69점	50점~59점	50점 미만
결과조치			경고	특별심사*	등재등급하락/취소 및 학술지평가/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 제한(5년 이내)

- * (특별심사) 특별심사 대상으로 확정되는 학술지는 차년도 학술지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학술지 평가 시 정성평가 평가위원에게 실태점검 결과자료를 함께 제공
- ** 학술단체지원사업 : 학술지발행지원, 학술대회개최지원,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보급지원 등

- (윤리항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조치 실시
 - '학술지 발행기관의 윤리성' 항목과 관련하여 학술지 발행기관의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이 인지되는 경우, 정량항목에 대한 실태점검 절차와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 후 별도 조치

〈 학술지 발행기관의 중대한 부정행위(예시) 〉

① 부당한 심사 절차

- 특정 논문 투고자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하여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 절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시: 투고자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편집 위원장이 특정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 계속 동일한 심사위원들로 구성하는 경우 등, 다만 논문 내용이나 성격이 주제나 방법론상 특수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② 발행 목적에 어긋나는 학술지 발행

- 학술지의 심사나 게재과정이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학술적 성격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시: 기업형 부실 심사 등)

③ 미자격자 또는 부당한 저자 표기

- 해당 학술지의 편집 규정이나 연구윤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저자의 자격요건에 현저히 위배된 경우 (예시: 주저자나 교신저자 또는 공동 저자를 박사학위 이상으로 규정하고도 고등학생을 저자로 표기하는 경우 등)
-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 저자의 순위나 표기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간되어 저자들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시: 저자 간 동의 없이 실질적으로 논문작성에 기여한 저자를 제외한다든지, 기여함이 없음에도 저자로 표기하든지, 순위를 바꾸어서 기재하여 저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④ 연구부정행위 동조 또는 발생 사실의 축소·은폐

- ①~③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에 조직적으로 동조했거나, 발생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학술지 발행기관의 운영과정에서 고소·고발 조치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⑥ 그 외 학술지등재제도관리지침(제3조제3항,제8조,제14조등)에 해당하는 경우

- 위원회는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가능
 - 1) 등재 등급 하락/취소 및 학술단체지원사업 최대 5년 이내 신청 제한
 - 2) 특별심사/경고 (**학술단체지원사업 최대 5년 이내 신청 제한 조치 또는 미조정 가능**)
 - ⇒ '특별심사/경고'를 받는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 제한 (최대5년 이내) 여부 결정
 - ※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 제한 기간은 종합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3) 단, **학술지 발행기관의 윤리책임 위반 또는 방조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하에 즉시 등재 탈락조치(예시 : 등재후보 · 등재 · 우수등재 학술지 → 일반학술지)
 - ※ 부실 학술지 원아웃 제도

- (그 외 주요 사항) 실태 점검 시(점검 대상이 되는 연도의 '학술지평가 시도 포함) 제출자료 및 증빙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우수등재,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 취소 가능
 -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지원사업에 최대 5년간 신청 제한 가능
 - ※ 실태점검 자료 제출 및 현장실사를 거부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함.

 **근거 규정(지침) : 학술지 등재 제도 관리지침[2020.03.30.개정]**

▣ 제8조(선정 취소 및 등재 등급 하락)

- ①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술지 등재 취소, 등재 등급 하락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논문게재를 조작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포함) 서류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2.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학술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② 제1항과 같이 학술지 선정이 취소 또는 등재 등급이 하락된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대해서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 지원사업(학술지지원사업, 학술대회지원사업,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사업)의 신청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실태점검)

- ① 재단은 학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진행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은 재단의 실태점검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③ 실태점검의 대상기관은 실태점검을 위해 재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구비하는 등 실태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 ④ 실태점검에 불응, 증빙자료의 미비 등 요청서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에 관계없이 우수등재 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취소될 수 있다.
- ⑤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경고, 특별심사, 학술지 등재 등급 하락, 등재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심사 조치를 받은 학술지는 학술지 평가 주기에 관계없이 차년도 학술지 평가대상으로 포함한다.
- ⑥ 실태점검 결과, 학술지 발행기관의 윤리책무 위반 또는 방조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등재 취소를 할 수 있다.

학술지 실례점검 사례집



2

부정(부실) 사례

2

부정(부실)사례

사례① 과거는 제게 남아있지 않아요.

실태점검 자료 미제출 및 부실 제출

사례1

A학술지는 논문과 심사서(원본) 등을 보관하던 학회 서버 삭제 및 JAMS(온라인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JAMS 사용 이전 연도의 게재불가논문과 심사서 전체를 미제출하였다.

사례2

B학술지는 논문 투고·심사를 해외 도메인 주소로 진행하였으나, 국내 주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도메인의 E-mail 계정 소실을 이유로 실태점검 요청자료 전체를 미제출하였다.

사례3

C학술지는 E-mail 저장용량의 문제로 논문 투고·심사가 이루어진 자료를 백업 없이 삭제하여, 논문투고심사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점검 요청자료 전체를 미제출하였다.

결과 및 조치

등재 취소,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제한 3년 조치

Check!

실태점검에선 학술지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요청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학술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미죠.
학술지 등재 제도 관리지침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에 관계없이 등재 취소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사례② 논문도 재사용이 되나요?

자신 또는 다른 학술지에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을 자신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사례

A학술지는 자신의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명으로 자신의 학술지에 투고하여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 처리하였다. 연구재단은 해당 학회의 논문을 무작위 선정하여 KCI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추출한 논문 건수의 75%가 평균 유사율 80% 이상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현장점검에서 학회는 이미 게재된 논문을 활용했음을 인정하였다.

결과 및 조치

등재 취소,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제한 3년 조치

Check!

통상적으로 학회/학술지의 논문 투고·심사 규정에는 타 학회/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체 유사도 검사를 통해 이를 관리하는 학회도 있죠.

이미 심사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을 자신의 학회/학술지에 투고한다면 **학술지평가 및 실태점검 조작(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되며 학회 자체 규정 위배**일 수 있어요!

사례③ 이 논문은 초면입니다만,

실제 투고·심사되지 않은 논문을 게재 불가 논문으로 사용

사례

A학술지가 실태점검에 제출한 논문투고대장의 게재불가논문을 무작위 선정하여 해당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자에게 실제로 투고·심사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는 해당 논문을 실제로 투고하거나, 심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과 및 조치

등재 취소,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제한 3년 조치

Check!

본인이 투고나 심사한 적도 없는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몹시 당황스러울 거예요.
실제로 투고나 심사하지 않은 논문을 게재불가논문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술지평가 및 실태점검 허위(조작) 자료 제출**에 해당해요!

사례④ 투고대장의 변신은 유지!

학술지평가 및 실태점검 시 제출한 논문투고대장 불일치

사례1

A학술지는 학술지평가와 실태점검에서 게재불가논문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누락된 논문 중에는 이미 게재 후 투고된 논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례2

B학술지는 학술지평가 당시 일부 게재 확정된 논문을 게재불가논문으로 제출하고, 이후 실태점검에서 같은 논문을 게재가로 표기하여 제출하였다.

※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추가 검토와 소명서 등을 통해 확인

결과 및 조치

| 사례1 | 등재 취소,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제한 3년 조치

| 사례2 | 등재 하락,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제한 1년 조치

Check!

학술지평가와 실태점검 시 제출하는 논문투고대장 자료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해요. 시기적 차이에 의해 일부 자료가 불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제출해서 평가받은 자료와 실태점검 시 제출하는 자료는 일치해야겠지요?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조작해서 낸다면 학술지평가 및 실태점검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

사례⑤ **공심은 데 팔이나고.**

논문의 제목과 초록 불일치! 논문의 내용과 심사내용 불일치!

사례

A학술지가 제출한 게재불가 및 게재논문과 심사서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논문에 제목 및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초록이 실려있었다. 특히 게재불가논문의 경우 제목 및 주제 등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심사의견*이 기술되어 있었다.

* 게재불가논문의 80% 이상이 해당

(예) 제 목 :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

초 록 : "해당 기술은 건강 치료 분야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여...(생략)"

심사서 : "테니스의 발전을 위해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이...(생략)"

결과 및 조치

등재 취소,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제한 3년 조치

Check!

논문 초록(抄錄, 抄 : 뽑을 초, 錄 : 기록할 록(녹))이란 말 그대로 논문의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둔 글을 말해요. 제목 및 주제와 전혀 무관한 초록이 들어가 있거나, 논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심사의견이 적혀있다면 정상적인 투고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겠죠? 더불어 공교롭게도 이들이 게재불가 논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학술지 발행기관의 윤리성 항목과 관련된 사항은 정량항목 점검 결과에 상관없이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통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례⑥ 발자국이 왜 남지 않을까?

논문의 심사의뢰비 또는 심사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례

A학술지가 제출한 논문투고대장 목록 중 게재불가논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일부 논문에 대해 투고자와 심사자가 투고 및 심사한 적이 없음을 1차 확인하였다. 이 논문들에 대해 심사의뢰비 및 심사비 내역의 증빙자료를 요청한 결과, 학회가 증빙하지 못한 대상에는 타 학술지 및 동일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과 투고자, 심사자 등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과 및 조치

등재 취소,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제한 3년 조치

Check!

실태점검에서 일부 논문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학회/학술지 측의 소명 등을 위해 심사의뢰비 또는 심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각 학회의 논문 투고·심사 규정에는 심사의뢰비와 심사비를 납부·지급하도록 명시해두었죠.

당연히 남아있어야 할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실태점검 요구자료 미제출과 학회 자체 규정 위배**에 해당될 수 있으며, 결국은 **학술지평가 및 실태점검 시 제출한 자료의 허위(조작)로** 귀결될 수도 있어요!

사례 ① $1+1=3?$

심사서 항목별 합계와 최종 합계 점수 불일치(조작)

사례

A학술지 게재불가논문 심사서의 심사 문항별 점수를 확인 후 합계를 계산하였다. 90% 이상의 논문이 실제 합계와 표기된 합계 점수가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료 제출을 위해 학회 측에서 임의로 표기하였음이 밝혀졌다.

결과 및 조치

등재 취소,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제한 3년 조치

Check!

논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이 문항별로 점수를 매긴 후 합계를 계산해 평가점수를 최종 입력(또는 기재)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일부 점수의 오기는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논문, 특히 게재불가논문의 다수 심사서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심사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는 **학술지평가 및 실태점검 시 제출자료의 허위(조작)에** 해당될 수 있어요.

사례 ③ 플레이어와 심판이 동일 인물이라고?

투고자가 심사자인 경우

사례

A학술지의 게재논문의 투고 및 심사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고자가 자신의 논문 심사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 사실에 대해 확인받았다.

결과 및 조치

등재 취소,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제한 3년 조치

Check!

투고자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겠조.

이러한 학술지 발행기관의 윤리성 항목과 관련된 사항은 정량항목 점검 결과에 상관없이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학술지 실례점검 사례집



3 주의 필요사례

※ 이하의 사례는 제재조치 사례가 아니며, 주의가 필요한 사례이거나 또는 학문분야/
학술지의 특성 등에 따라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 ① 연구윤리에도 수명이 있나요? 이젠 없어요!

연구윤리 규정 검증시효 폐지

사례

A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에는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규정 검증시효 폐지 협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증시효가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

학회/학술지 조치

A학술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윤리 규정의 검증시효 조항을 폐지했어요.

Check!

교육부는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윤리 검증시효를 삭제했어요. 최근 2021년 각 학회/학술지는 연구윤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체 연구윤리 규정 검증시효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교육부 공문을 안내받은 바 있어요. 자신의 학회/학술지 규정에는 아직까지 검증시효가 남아있지 않은 지 꼭 확인해주세요!

사례② 한번도 개최될 수 없는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제소에 일정 수 정회원 서명 필수

사례

A연구자는 B학회/학술지의 윤리위원회 제소를 위한 절차를 확인하였으나, 학회 규정에는 윤리위원회 제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포기하였다. 사실상 B학회는 최근 10년간 아무리 신고를 해도 단 한 번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회/학술지 조치

B학회는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윤리위원회 제소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정회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개인도 제보할 수 있도록 수정했어요.

Check!

학회가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 윤리성 문제를 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개선 시켜나갈 수도 있겠죠? 연구윤리위원회 제소에 정회원들의 서명이 요구된다면 부정(부실) 의심 사례가 있어도 쉽게 제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직 학회/학술지에 이러한 규정이 남아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례 ③ 심사를 거치니 번역이 되는 마법이 일어났다?

국문 논문으로 심사 후, 별도 심사없이 영어 논문으로 게재

사례

A학술지의 게재논문이 당초 국문으로 심사를 받은 후, 학회 자체의 심사 규정과 다르게 별도 심사과정 없이 영어로 번역된 논문으로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학회는 자체 규정상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학회/학술지 조치

A학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논문 심사 규정에 투고 당시 사용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Check!

학회(학술지)의 논문은 자체 투고심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겠지요. 혹시 분야별 또는 학술지 특성 등에 따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사례④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지양해야겠죠!

임원진 또는 특정 소속의 심사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

사례

재단은 실태점검 대상 학술지의 점검 기간에 포함된 모든 논문 심사자의 '임원진 여부'와 '소속기관 비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임원진의 심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A학술지는 85% 이상이었으며, 특정 소속의 심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B학술지는 65% 이상이었다.

〈표 1〉 A학술지의 실태점검 대상 전체
논문에 대한 임원진 심사 비율

소속(직위)	비율
한국대학교(임원)	30.0%
연구대학교(임원)	25.0%
재단대학교(임원)	15.0%
⋮	⋮
계(임원진)	85.0%

〈표 2〉 B학술지의 실태점검 대상 전체
논문에 대한 심사자 소속 비율

심사자 소속	비율
한국대학교	65.0%
연구대학교	5.0%
재단대학교	5.0%
⋮	⋮

학회/학술지 조치

A~B학회(학술지)는 이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동시에 점검 기간 이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심사자의 임원진 참여 비율과 특정 소속기관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어요!



Check!

임원진이나 특정 소속의 심사자로부터 편중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특정 투고자에게 유리하거나,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왕이면 학회/학술지는 다양한 심사위원 Pool을 구축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사례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일, 입력 시간이 유사한 경우

사례

A학술지 논문들의 심사서 업로드 기록을 통해 심사날짜와 시간을 확인한 결과, 수 건의 논문에 대해 심사자 3인이 모두 같은 날짜의 유사 시간대에 심사서를 작성·입력했음을 확인하였다. 짧게는 5분 이내 3인이 심사서를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논문명	게재여부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심사일	시간	심사일	시간	심사일	시간
A	게재불가	20200101	14:02:26	20200101	14:00:56	20200101	14:03:18
B	게재불가	2020111	15:00:15	2020111	15:06:36	2020111	15:12:17
C	게재불가	20200121	19:30:25	20200121	19:45:26	20200121	19:39:27

·
·
·

Check!

실태점검에서는 심사서 원문뿐만이 아니라 업로드 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어요. 만약 수차례에 걸쳐 여러 명이 비슷한 일시에 맞춰 등록했다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이런 경우 추가검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사례 ⑥ [System] 비정상적 트래픽이 감지되었습니다.

투고자 계정 무작위 생성

사례

A학술지의 투고 시스템 기록 확인을 통해 수차례 같은 날짜에 수십 개의 비슷한 패턴의 ID가 무작위로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투고 일자	논문명	저자명	계정	계정생성날짜
20200101	A	-	aaa001	2020-05-01
20200111	B	-	aaa002	2020-05-01
20200121	C	-	aaa003	2020-05-01
		.		
		.		
		.		
20200201	X	-	1111	2020-05-05
20200211	Y	-	2222	2020-05-05
20200221	Z	-	3333	2020-05-05

Check!

실태점검에서는 논문 투고대장과 게재불가논문의 투고 기록도 확인하고 있어요. 같은 날짜에 유사한 ID들이 무작위로 생성되어 투고했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투고를 진행했다고 생각되겠죠? 이런 경우 추가검토를 진행할 수 있어요.

| 기획 |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팀

| 발행 |

2022년 4월 27일 초판 1쇄 인쇄

| 인쇄/편집 |

커뮤니케이션공감(주)

| 비매품 |

이 책의 원문파일(PDF)은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https://www.kci.go.kr>)의 공지 사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책자의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에 있으며, 관련 내용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술지 실재점검 사례집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042-869-6114 Fax. 042-869-6777